

與, 이상직·김홍걸 윤리감찰단 회부...윤미향 당원권 정지

민주당, 최고위서 의결...이상직·김홍걸,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 1호 “윤미향 기소,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여...법원 판단 따라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과 재산신고 누락 및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홍걸 의원을 새로 출범시킨 윤리감찰단에 회부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의혹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당직과 당원권 정지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회의 결과 이상

직·김홍걸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단의 즉각적 조사와 판단을 요청기로 했다”며 “이상직·김홍걸 의원 건이 윤리감찰단의 조사대상 1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출범시킨 윤리감찰단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자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전담키 위해 설치하기로 한 당 대표 직속 기구다.

윤리감찰단은 민주당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게 최 수석대변인

의 설명이다. 윤리감찰단이 당내 인사 관련 사안이나 의혹을 조사하면 그에 대한 최종 판단이나 결정을 당내 다른 조직인 윤리심판원이 맡는다. 윤리감찰단이 감찰 역할을, 윤리심판원이 법원 역할을 맡는 식이다.

윤리감찰단의 첫 조사 대상이 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임금체불과 605명의 임직원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등록 당시 10억원대 분양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산 신고에 누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2016년 연말아 주책 3제를 구

입했다는 의혹이 더해지며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대표는 윤리감찰단의 즉각적인 활동개시를 위해 운영규칙 제정과 실무진 배치 등 만반의 준비를 지시했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사자 의견 진술 등과 관련해 “앞으로 세세한 운영규칙이 정해지겠지만 당연히 조사이니까 필요한 모든 일들은 다 한다고 봐야 한다”며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이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때 가장 중요 공약 중 하나로 윤리감찰단 구성을 약속했다. 앞으로 당 내부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원칙 하에서 이상직·김홍걸 의원에 대

해 조사 대상 1호로 회부한 것”이라며 “즉각적 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빠른 시간 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의연 기부금 및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금 유용 등의 의혹으로 고발돼 업무상 횡령·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에 대해서는 당직 및 당원권 정지를 의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은 윤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민단체의 국가보조금 사용에 대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만 윤 의원의 경우 검찰 조사와 기소가 이뤄진 만큼 윤리감찰단 회부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 의원은 이미 검찰에서 조사가 끝나서 기소가 됐다. 당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며 “만약 이상직·김홍걸 의원처럼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당연히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을 윤리감찰단장으로 선임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전국 법관대표회의의 의장으로 일하셨고 소신 판결로 신뢰를 쌓은 분”이라며 “새로 출범하는 윤리감찰단이 엄정한 기조를 갖고 강단 있고 신속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 기자

취임 100일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 개혁 속도 낼 것”

“정책 협치의 전기 마련”
“세종의사당 설치 속도”
“균형발전 한 획 그을 것”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여야 협치의 전기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고, 국회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날 코로나19 방역 규칙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취임 100일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여야 당대표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하고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한 것 등을 언급하며 “다채널 여야 협의로 협치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박 의장은 “정책 협치를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이어 당대표 월례회동, 중진의원 간담회까지 정례화를 이룸으로써 협치의 체질을 갖추었다. 다음주에는 국회의장 주제로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도 있을 예정이다”라며 “더 많은 소통의 장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통이 쌓이면 신뢰도, 협치의 기반도 두터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이제는 ‘당론 최소화’와 ‘상



취임 100일을 맞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화상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임위 중심의 상시국회’로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 때가 됐다. 그래야 세상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다”며 “국회의장은 ‘정책협치’의 촉진자가 되겠다. 정책경쟁을 촉진해 의회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길잡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도처럼 닥쳐오는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민생 등 비쟁점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기국회가 끝나면 국회 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집권여당이 약속한 법사위 권한 조정도 조속히 마무리해줄 바란다. 실기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의 터를 닦아야 한다”며 “세종국회의사당은 국가 균형발전의 한 획을 그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의장은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내후년 상반기에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가 세달 간격으로 열린다.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상된다”며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김태년 “추경, 22일 처리 후 추석 집행되게 만반의 준비를”

소상공인·자영업자·구직자 맞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이 추석 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오는 22일 분회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코로나로 고통 겪는 국민께 다소나마 위안되는 소식을 전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구직자를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인 만큼 제정이 적재적소에 투입돼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심사하겠다”며 “정부가 4차 추경의 추석 전 집행을 위해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데 더 철저히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언론인터뷰에서 밝혔다. 민주당의 공정거래 3법 추진에 대한 김 위원장의 화답을 환영한다”며 “여야가 협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어 “19대, 20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가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또 그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됐다”며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선하면서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3법을 처리해서 공정경제의 제도적 토대를 쌓아야 한다”며 “관련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추경, 22일 처리 후 추석 집행되게 만반의 준비를”

추미에 법무부 장관 사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갈리는 가운데 사퇴 주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추 장관 사퇴 주장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들의 군 복무 기간 중 병가 문제가 ‘권력형 비리’이기 때문에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49.0%(매우 동의 41.8%, 어느 정도 동의 7.2%), 근거없는 정치공세이기 때문에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45.8%(전혀 동의하지 않음 36.3%, 별로 동의하지 않음 9.5%)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5.2%였다.

지역별로 추 장관 사퇴 주장 동의 응답은 대구·경북(동의 63.3% vs 비동의 30.3%), 부산·울산·경남(61.5% vs 37.4%), 서울(54.8% vs 38.9%), 대전·세종·충청(54.1% vs. 41.6%)에서 다수를 차지했다. 광주·전라(30.1% vs 63.2%), 경기·인천(39.6% vs 55.1%)에서는 비동의의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학생층인 20대(56.8% vs 36.8%)와 노년층 60대(67.3% vs 28.0%)와 70대 이상(54.3% vs 40.5%)에서는 동의의 응답이 높은 반면 40대(31.6% vs 65.5%)와 50대(43.2% vs 50.4%)에서는 비동의의 응답이 다수였다. 30대(46.8% vs 47.3%)에서는 사퇴 찬·반 응답이 팽팽했다.

秋 장관 사퇴 여론 팽팽

‘동의’ 49.0% vs ‘비동의’ 45.8%

추미에 법무부 장관 사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갈리는 가운데 사퇴 주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추 장관 사퇴 주장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들의 군 복무 기간 중 병가 문제가 ‘권력형 비리’이기 때문에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49.0%(매우 동의 41.8%, 어느 정도 동의 7.2%), 근거없는 정치공세이기 때문에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45.8%(전혀 동의하지 않음 36.3%, 별로 동의하지 않음 9.5%)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5.2%였다.

지역별로 추 장관 사퇴 주장 동의 응답은 대구·경북(동의 63.3% vs 비동의 30.3%), 부산·울산·경남(61.5% vs 37.4%), 서울(54.8% vs 38.9%), 대전·세종·충청(54.1% vs. 41.6%)에서 다수를 차지했다. 광주·전라(30.1% vs 63.2%), 경기·인천(39.6% vs 55.1%)에서는 비동의의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학생층인 20대(56.8% vs 36.8%)와 노년층 60대(67.3% vs 28.0%)와 70대 이상(54.3% vs 40.5%)에서는 동의의 응답이 높은 반면 40대(31.6% vs 65.5%)와 50대(43.2% vs 50.4%)에서는 비동의의 응답이 다수였다. 30대(46.8% vs 47.3%)에서는 사퇴 찬·반 응답이 팽팽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